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 ·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
입니다.
-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문화재 주변 주민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
하기 위해 발의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풍납토성, 종묘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 획일적인
높이 규제로 신축·재건축이나 도시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서울시장은 지난 5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정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결을 위해 문화재청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모호한 규제내용을 명시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의원이 발의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두고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현재, 문화재 인근 주민은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기 힘든 상황이며,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계획이 없어 불안감만 켜켜이 누적 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건의안은 과도한 문화재 규제 및 지방자치단체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함께 문화재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또한, 문화재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통

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 문화재청이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서울의 특수성을 담고, 문화재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서울 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